

기부하고 답례품 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낱이 줄어들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고민이 깊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써서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성과가 마땅치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 수준인 113곳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주민들이 떠나고, 그래서 고령층만 남다보니 생산가능인구는 사라져 재정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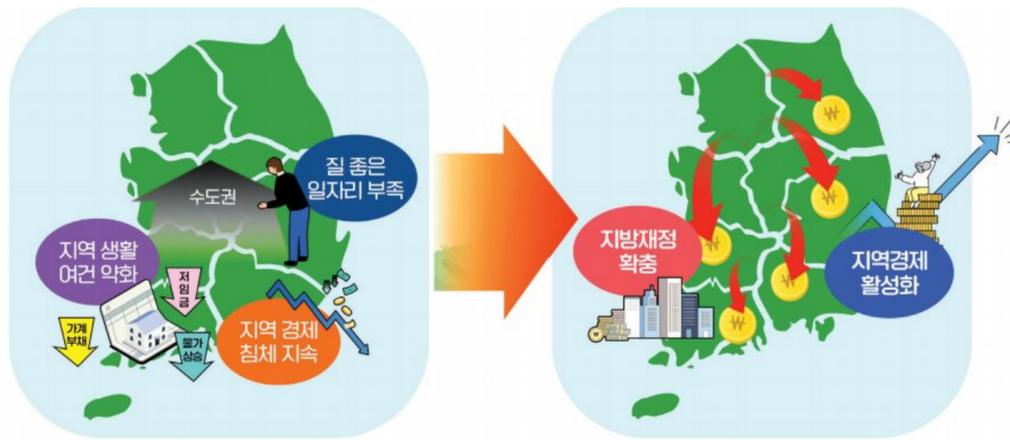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카드가 '고향사랑기부제'다.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 등 특정지역을 지정,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발적 기부로 국가균형발전 도모=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고향을 비롯한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의 30%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집,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윈-윈(win-win)' 정책인 셈이다.

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통해 모집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내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거나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결국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개인 500만원 한도,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아직 할 수 없다. 기부 대상은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이며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된



전국 절반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정...기부금 받아 국토균형발전 내년부터 1인 年 500만원 내 기부...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지자체, 기부금 30% 내 답례품 제공...재정 확충·경제 활성화 도모

다. 만약 개인이 10만원을 특정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만큼 세금을 돌려받고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에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다만, 기억해야 할 부분은 기부금액이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비율로 세액을 공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8,0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000원)

◇제도 성공의 핵심요소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에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시행중인 일본의 경우도 답례품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일본은 2008년 865억원이었던 고향납세금액이 2020년에는 7조1,486억원으로 83배나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답례품으로는 각 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특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가능하다. 지역 내 유명 관광시설의 입장료 할인권이나, 숙박권 등으로 답례하는 것 또한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로 연결시킬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이같은 답례품은 각 자치단체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2007년 첫 논의 후 15년 만의 결실=2007년부터 논의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부금 법을 제정하고, 추진 15년 만인 지난 7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을 통해 입법과정을 마쳤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시행령 제정에 앞서 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및 시스템 구축 구성방안을 찾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5월19일에는 충청호남권, 5월23일에는 영남권, 5.25일에는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각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 관리 및 운용, 답례품 선정절차 등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1차)한 뒤,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기부금 온라인 접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연계, 기부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복안이다.

◇내년 6월까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창구가 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243개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쩌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가장 뛰어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건전한 기부 문화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돕고 국토균형발전 이룹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공직자와 국민들을 위해,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을 통해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고향'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한곳에 정착한 사람들도 기부를 할 수 있나요.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신 분들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가는 곳 또는 가고 싶은 곳 등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한 곳이라는 의미로 외연이 확장되었습니다. 5도2촌, 귀농·귀촌, 당일치기 여행 열풍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한 가지 핵심요소로 무엇을 들 수 있나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핵심요소로 하나를 뽑는다면 '매력있는 답례품 발굴'입니다. 국민이 기부로 관계를 맺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례품을 제공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답례품 구성에는 제한이 있나요? 지자체에서는 답례품 준비에 한창일텐데, 지자체 준비상황이 궁금합니다.

▲유관법령에 따라 답례품으로는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 고가의 귀금속, 관할구역 외에서도 통용되는 상품권은 줄 수 없고, 경마장, 경륜장 등의 사행성 요소가 있는 답례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연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후 답례품을 선정하여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향후계획과 함께 한줄 어록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답례품 관련 해외 우수사례 발굴,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홍보 전략 어떻게

'나의 살던 고향'에 모이는 기부금, 어떻게 모을까.

전남도도와 22개 시·군 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관련, 모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제도를 모르면 기부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부금 제도를 적극 알려 모금액 확대에 이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 판

다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현재(9.5%)보다 높아질 경우 기존 전국 모금 예상액(987억)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인식이 20%로 올라가게 되면 기부금액은 2077억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특히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

해서만 모금할 수 있는 점과 출향인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 TV·라디오, 중앙지, KTX·역·도심 전광판 등 옥외매체 등 고령층에게 접근성이 높은 매체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답례품 선정도 고민중이다.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 관련, 기부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 기부했다고 응답한 사례를 들어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답례품은 필수적이다.

전남도는 답례품의 경우 '응답자의 50%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농산물을 선호한다'는 지난 2019년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3만원 이하의 지역 특산품을 주로 구성하면서 남도장터 입점상품, 고향방문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할인권, 전남사랑 꾸러미 등을 답례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지용 기자 dok2000@

고령층 타깃 옥외매체 공략... 매력있는 답례품 '물색'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통량주지점, 각학지점

